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2년 12월 1일(목) 총 2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담당자	• 기획팀장 이규석 ☎440-2131 • 담당자 정경숙 ☎440-213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 따른 민·관 합동 대책 마련
- 인천시-인천상공회의소·인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 관련기관과 소통채널 구축 -
- 수출·입 화물운송차질 및 물류 피해 발생 대비 철저한 대응책 강구 -

인천광역시는 11월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과 이로 인한 화물 운송 차질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12월 1일 유정복 시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인천에서도 지난 11월 24일 인천항 화물 반출입량이 23일 대비 60%가 감소하는 등 항만업계를 비롯해 시멘트, 정유, 철강, 자동차업계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유류 품질 주유소도 4곳(전국 26곳, 2022년 11월 30일 14시 기준)이 발생했다. 이처럼 시민들의 실생활에도 화물연대 파업의 여파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에 따라 시는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민·관 합동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유정복 시장은 “화물연대 총파업 7일째인 30일 정부와 노조 측이 2차 교섭을 벌였지만, 논의에 진전을 전혀 이루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인천 경제는 물론 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시화되고 있어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인천도시공사 등 관련 기관들과 현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로 하고 인천시 피해 상황에 대한 분야별 대응책을 집중 논의했다.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 대한 주요 대응 방안은 ▲분야별 대응 계획 수립 ▲매뉴얼에 따른 단계별 대응 체계 구축·운영, ▲지역경제피해 모니터링, ▲불법 주정차 단속, ▲유류 수급 대응, ▲인력 지원 및 관리, ▲재난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대시민 홍보 체계 구축, ▲주택 건설사업 등에 대한 대응책 추진 등이다.

인천시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각 분야에서 화물운송에 대한 피해와 시민들의 어려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긴급 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 수송대책을 마련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란다” 고 주문했다.

※ 관련 사진은 회의(9시30분)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